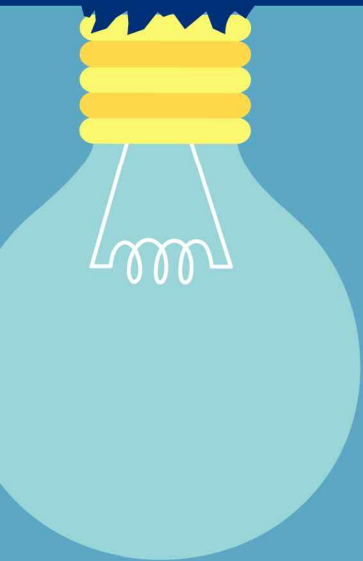




교육의 자유 3차 토론회

대한민국의 교육, '자유'를 만나야 바로 선다!

| 일시 | 2016년 9월 23일(금) 오후 2시

| 장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 주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 순 서 ————— ■

■ 사 회

- 박 주 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 발 제

- 전 용 덕 (대구대 무역학과 교수 / 『교육도 경제행위다』 저자)

■ 토 론

- 김 상 국 (더나은미래세대포럼 공동대표)
- 한 상 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 황 성 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

■ 질의·응답

■ 폐 회



■ 목 차 ■

■ 발 제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본 한국 교육의 주요 문제점.....7

- 전 용 덕 (대구대 무역학과 교수 / 『교육도 경제행위다』 저자)

■ 토 론

교육 개혁의 길.....15

- 김 상 국 (더나은미래세대포럼 공동대표)

교육 환경의 변화와 인력양성의 방향.....23

- 한 상 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대한민국의 교육, ‘자유’를 만나야 바로 선다!.....27

- 황 성 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본 한국 교육의 주요 문제점

전 용 덕

대구대 무역학과 교수

I. 서론

교육열이 높다는 것의 ‘경제적’ 의미→높은 가격 또는 많은 비용 지출 용의가 있음

정부의 각종 규제는 교육비를 불필요하게 많이 지출하게 만들고, 비용 지출을 분산하게 만들며, 그 결과 당사자들도 자원을 낭비하고 다른 부문에 자원이 부족해져서 경제성장이 느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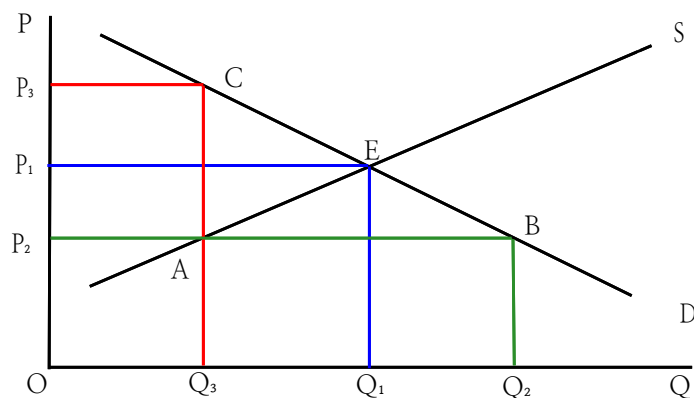
II. 본론

1. 학생과 학부모

(1)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대학교육은 가격규제가 강력하게 가해진 것 그 결과 초과수요(excess demand) 발생 (<그림 1>) 그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원규제 = 배급제(rationing)

<그림 1> 최대가격과 그 폐해



○ 각종 피해

- 배급제는 해마다 많은 재수생 양산→노동시장의 노동공급 축소→노동비용 상승→기업의 경쟁력 약화→경제성장 느려짐
- 유학생, 유학이민, 어학연수, 두뇌유출→유학 가정 너무 많은 비용 지불
-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이혼과 같은 가정 파괴
- 학생의 자살
- 학교 폭력
- 대학의 경쟁력 약화
- 위장 전입
- 과다한 사설학원
- 너무 많음

○ 공교육의 부실이 사교육의 증대를 가져왔나?

- 아니다
- 가격규제와 정원규제가 사교육 증대의 궁극적 원인
- 대책 : 가격규제와 정원규제를 철폐하여 교육을 정상화하면 사교육은 크게 줄어들고, 그 다음 단계에 지원이 필요한 공립학교 교육에 지원
정부의 교육비 지출 대폭 감소
현재와 같은 단순한 공교육 지원 증대는 자원 낭비만 초래

(2) 고교선택 불가

○ 선택의 자유는? <표 1>

- 자유로운 선택은 학부모의 권리
- 평준화 정책은 그런 권리를 부정하고 있음

<표 1> 연도별 유형별 고등학교 수

단위: 개

		2011년	2012년	2013년
일반고		1,554(68.1%)	1,529(66.4%)	1,525(65.7%)
자율고	국공립	58(2.5%)	97(4.2%)	116(5.0%)
	사립	51(2.2%)	50(2.2%)	49(2.1%)
	소계	109(4.8%)	147(6.4%)	165(7.2%)
특수목적고		120(5.3%)	128(5.6%)	138(5.9%)
특성화고		499(21.9%)	499(21.7%)	494(21.3%)
총 계		2,282(100.0%)	2,303(100.0%)	2,322(100.0%)

※ 자료: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 주: 1. 괄호 안은 총계에서 각 유형별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임

2. 반올림으로 인하여 각 항목의 총계가 100%이 안 될 수 있음

3. 특수목적고는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체육고, 마이스터고로 구분
4. 특성화고는 전문계열 특목고(농업, 공업, 수산, 해양), 전문계고, 특성화고로 구분

(3) 영어교육의 실패

- 조선시대의 한자(전용)교육: 우민화 정책
- 21세기 한글(전용)교육: 신유목민(세계화) 시대에 신우민화 정책

2. 교사

(1) 학교폭력

- 가해자를 제외한다면
 - 1차 책임자는 교사
 - 2차 책임자는 각급 학교 교장
 - 3차 책임자는 제도를 입안하는 정부
- 현행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는가?

(2)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좌파 지식의 확산

3. 학교

(1) 지나치게 많은 국공립학교와 자율성의 부족

- 국공립 학교는 얼마나? <표 2>
 - 자유시장에 잘 맞는 학교는 순수한 의미의 사립학교 체제
 - 국공립학교 체제는 반자유시장적인 학교체제

<표 2> 학교 수준별·설립주체별 학생수 비율(2014년)

단위: 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총 계	2,728,509 (100%)	1,718,854 (100%)	1,852,534 (100%)	789,045 (100%)	2,548,830 (100%)
국공립	2,688,332 (98.5%)	1,417,490 (82.5%)	797,690 (43.1%)	15,341 (1.9%)	751,800 (29.5%)
사 립	40,177 (1.5%)	301,364 (17.5%)	1,054,844 (56.9%)	773,704 (98.1%)	1,797,030 (70.5%)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14.

○ 국공립학교 체제의 문제점

- 첫째, 세금이 많이 든다
- 둘째, 소득재분배
- 셋째, 정부가 국공립학교를 통제함으로써 사립학교를 간접적으로 통제
- 넷째, 국공립학교 교사와 교수는 공무원
연공서열제, 즉 교사 간 또는 교수 간, 경쟁이 약함
- 다섯째, 국공립학교가 학부모의 요구에 덜 민감
- 여섯째, 사립학교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
- 일곱째, 국공립학교가 공유의 비극에 빠지기 쉽다
- 여덟째, 한국의 사립학교는 자율성이 너무 부족하여 국공립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음

(2) 낮은 경쟁력의 대학교육

○ 대학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비중 <표 3>

○ 대학교육의 경쟁력 <표 4>

○ 대학교육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유학, 조기유학, 유학이민 등이 발생하는 이유와 동일: 가격규제, 정원규제

○ 여기에 연공서열제가 가세

<표 3> 대학별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비중과 수업분담률(2014년

단위: %, 명

구분\대학별	일반대학교(학부)			전문대학교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54.2	40.6	54.6	56.5	39.4	45.7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재학생 기준)	37.36	32.13	27.56	21.47	34.43	36.52
전임교원확보율(재학생기준)	71.7	59.9	74.7	85.3	59.9	57.5

※ 자료: 대학알리미

※ 주 : 1) 전임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2) 강의 담당 비율 = (강의 담당 학점/총개설강의학점)*100

3) 전임교원확보율 = (전임교원/교원법정정원(재학생기준))8100

<표 4>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경쟁력 순위

	2010	2011	2012	2013	2014
교육제도	31	20	27	27	29
대학교육	46	39	42	41	53
고등교육이수율	2	2	2	2	2

※자료: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4.

※주: 조사 대상 60개국 중에서의 순위를 나타냄

(3) 대학의 지배구조

- 개방이사제도는 대학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반자본주의적 제도
- 대학 평의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

4. 정부

(1) 반시장적 규제의 양산

- 모든 규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표 5>

<표 5> 해방 이후 주요 교육 정책의 구분

	친시장 정책	반시장 정책
가격 관련 정책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1989)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2003)	초등학교 의무교육 중학교 학교 운영비 징수 폐지 (2010-13) 기여입학제 금지(1995)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2010) 만5세 유아 교육비 전액 지원(2012) 만3-4세 유아 교육비 전액 지원 (2013)
비가격 관련 정책	대입제도 대학 자율(본고사, 논술고사 등) 자립형 사립고 도입(1995) 과외 전면 허용(2000) 개방형 자율 학교 허용(2006) 국제 중학교 설립 허용(2008) 고교 선택제(2008) 체벌금지(2011) 학생자치활동 활성화(2011) 자율형 사립고(2010) 학부모 상담제(2011)	대입제도 국가 관리(대학예비고사, 수학능력고사 등) 중학교 입시 폐지(1969) 고교평준화(1974) 내신도입(1980) 과외금지(1980) 대학졸업정원제(1980) 대학입학정원제(1988) 본고사 금지(1995) BK21사업(1997) 고교등급제 금지(1998) 교원노조 설립 허용(1999) 혁신학교(2009)

※자료: 안재욱 외(2011), 147쪽 내용을 일부 수정

※주: 가격 관련 정책과 비가격 관련 정책을 엄밀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과도한 교육비 지출

- 정부의 교육비 지출의 실상 <표 6>
- 과도한 교육비 지출→교육 부문에 너무 많은 자원→다른 부문들에 너무 적은 자원→
- 경제성장이 낮아짐→실업(악순환이 반복)

<표 6> 연도별 교육비 지출과 학생 수의 변화

단위: 십억원, 천명, %

연도/ 구분	GDP (A)	교육부 예산 (B)	민간 교육비 지출 (C)	(D) =(B+C)	(E) =(B/A) *100	(F) =(C/A))*100	(G) =(D/A) *100	(H) 학생 수*
1988	140,524.8	3,610.8	3,788.7	7,399.5	2.57	2.70	5.27	11,218
1993	298,761.6	9,831.4	8,578.5	18,409.9	3.29	2.87	6.16	10,915
1998	501,027.2	18,127.8	15,001.3	33,129.1	3.62	2.99	6.61	11,124
2003	767,113.7	20,194.2	26,068.6	46,262.8	2.63	3.40	6.03	11,325
2008	1,026,451.8	35,319.0	40,351.1	75,670.1	3.44	3.93	7.37	11,094
2009	1,063,059.1	38,022.3	41,211.5	79,233.8	3.58	3.88	7.45	10,943
2010	1,265,300.0	41,627.5	42,134.3	83,761.8	3.29	3.33	6.62	10,880
2011	1,332,700.0	45,116.6	42,812.1	87,928.7	3.39	3.21	6.60	10,726
2012	1,377,500.0	53,263.7	40,866.0	94,129.7	3.87	2.97	6.84	10,450
2013	1,428,300.0	57,134.4	40,458.3	97,592.7	4.00	2.83	6.83	10,191

※ 자료: GDP - 통계청

교육부 예산 - 교육통계서비스(교육통계연보, 1988-2013),

교육재정 - 정부예산 규모 대 교육부 세출예산

교육비 지출 - 통계청(국민계정,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학생수: 교육통계서비스(교육통계연보, 1988-2013)

※ 주: * 학생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의 총합임. 고등학생은 일반고와 전문계고의 총합이고, 대학생은 전문대학, 일반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 대학, 기타대학(개방대학, 각종 대학 포함)의 총합임.

III. 결론

○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 4차 산업혁명이 필요하다고?

○ 교육, 쌀을 포함한 농림수산, 노동조합, 정부, 정치, 군대, 공기업(예를 들어, 전기), 화폐제도, 금융제도 등에서 1차 산업혁명이 필요함

교육 개혁의 길

-정부 개입의 최소화, 소비자의 학교 선택권, 공급자의 학교 운영권과 학생 선발권

김 상 국

더나은미래세대포럼 공동대표

흔히 우리 교육의 문제는 “고비용, 저효율”으로 요약되어 비판된다. 비용에는 화폐적 측면뿐 아니라, 시간과 노력, 기회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는 실질적인 성인(교환 경제의 당당한 행위자)이 되기까지 필요한 지식의 양과 습득 기간이 길어진 이유도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교육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려는 경향, 경쟁에 대한 부정적 시각, 결과적 평등에 집착하는 사회적 분위기, 대중 영합주의, 관(官)주도 정책, 그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선택의 자유가 질식된 것 등이 주된 이유이다.

교육은 수요와 공급, 선택과 비용이 발생하는 사실상 경제행위이다. 우리 교육의 제반 문제는 교육에 과도한 신성함을 부여하는 태도를 벗어나 시장논리로 접근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시장은 이런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이하의 글에서 이런 주장을 설명하며 동시에 우리 교육의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교육의 목적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필자는 한 인간을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시켜 사회 공동체에 편입시키기 위한 기본 시민교육의 공공재적 성격을 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논의를 학생의 진로를 위한 교육에 제한한다.

“태초에 교환이 있었다.”는 말이 웅변하듯 인간은 교환의 동물이다. 교환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되게 하는 가장 큰 특징이다. 인간답기 위해서는 타인과 교환할 가치를 생산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교육은 이런 능력을 길러 미래에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이며 개인의 선택사항이다. 따라서 교육은 선택과 비용이 동반되는 명백한 경제적 행위이다.

교육을 고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 인성교육의 강조, 직업교육에 대한 천시 등은 교환경제에 내재된 도덕성을 발견하지 못한 결과이다. 약탈은 상대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그 상대를 파괴함으로서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을 결과적으로 약화시키는 행위이다. 이에 반해 교환은 상대방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한다. 나에게 중요한 것을 나의 덜 중요한 것과 바꿈으로서 부와 행복이 증가한다. 이런 교환 경제는 인간을 우물 안의 개구리에서 벗어나 세상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식의 지평을 넓히게 한다.

진정한 인성교육은 인간을 교환에 참여 시키고 상대방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과의 협업관계에 참여하고 평판이 좋은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 느끼게 하는 것, 폭력이나 협잡보다 주변의 평판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즉, 직업교육이 최고의 인성교육이다.

경쟁에 대한 생각

소비자로서 생산자들의 경쟁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자신이 경쟁의 참가자가 되는 상황은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경쟁은 개인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process)이며 완료가 아닌 동사적 의미이다. 또한, 사회 전체로는 인적 자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기제(mechanism)의 역할을 한다. 누구도 교환경제 내에서 자신의 최적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인간은 경쟁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최적 가치를 알게 되며 생산을 통해 타인의 행복에 기여한다. 또한, 이러한 경쟁과정은 마치 잉크 방울이 떨어진 물을 휘저어 주는 행위처럼 다양한 인적자산을 교환경제의 각 요소에 효율적으로 위치시킨다.

이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일정하게 주어진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은 없을 수 없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비용도 수반되기 마련이다. 대학 입시 경쟁은 각 개인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알아가고 이에 걸맞은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우리에게 후손을 다른 아이들보다 잘 길러서 좋은 조건에서 출발을 시켜야 한다는 생명체로서의 본능적 의무감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의무감이 지나치면 아이를 지나치게 자존감이 높거나 낮은 존재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평등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아직 '차별과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차별(discrimination)이란 '

키, 인종, 성별, 출신지역' 등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특성을 기준으로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다. 차이(difference)란 '실력, 소질, 적성, 노력' 등 개인에 의해 변경 가능한 다름을 뜻한다. '공정(公正)함'이란 이런 다름에 따른 프리미엄을 인정하되 기회 자체는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문제를 부당한 사회적 차별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고 “차별 금지”는 대중적 인기가 있는 구호이다. 그래서 인간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차이를 차별이라고 억지 주장하고 결과의 평등에 집착한다. 그러나 이런 경향은 질투에 기반한 남의 성공을 배 아파하는 정서일 뿐이며 결국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을 망가뜨려 자신들에게도 손해가 된다.

공정한 사회는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는 곳이지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곳이 아니다. 노력과 적성에 맞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곳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싹틀 수 없다. 역사적으로도 차별 철폐와 결과의 평등을 내세운 유토피아는 사실 인간의 자유와 삶의 질을 압살하는 지옥으로 변했다. 반면 인간능력의 한계와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정착시켜 온 사회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선진화된 사회로 발전했다.

교육에 있어 불평등으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부모의 부에 따른 지역 격차와 사교육 접근성의 격차일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교육특구도 머리 좋은 부모들이 많이 거주하고, 환경적으로 일찍부터 학습에 노출되는 환경적 요인으로 평균 학력이 높은 것이다. 여기에 최근 과도한 평등논리에 따라 수능 시험이 쉬어진 것도 한 몫을 한다. 오히려 이럴수록 학교운영권의 자유를 보장하고 학교선택권을 소비자에 돌려주어 경쟁이 활성화되게 해야 한다. 경쟁을 통해 각 지역에 입시에 강한 학교가 생겨나고 좋은 사교육이 그 지역에 진출할 요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최근 사교육도 치열한 경쟁의 효과로 가격대비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으며 절대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다. 일례로 질 좋은 인터넷강의도 전 과목을 1년 동안 30만원 정도에 수강할 수 있다. 오히려 내신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사교육에 학생의 모든 시간과 학습관리까지 통째로 맡겨 버리려는 학부형들의 경향이 사교육비 부담을 가져오는 것이다. 필자의 오랜 경험으로 보면 요즘에 집안이 가난해서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이고 엄살이다.

포퓰리즘 교육철학과 정책

우리 사회에는 교육에 대해서 대중의 비합리적인 정서에 영합하는 교육철학이 유행이다. 이것은 학생 인권조례, 무상급식, 사교육 억제를 위한 쉬운 시험, 학력 차별 금지, 반값 등록금 등으로 대표된다. 포퓰리즘의 문제는 현재의 일시적 편익과 유행하는 사고 때

문에 미래를 망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고는 얼핏 과거의 문제를 극복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기성의 것을 부정한다는 획일성을 착각한 것에 불과하다. 사교육 억제 정책에 맞춘 쉬운 시험은 뒤의 학생 선발권에서 언급하므로 여기서는 글의 주제에 맞게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만 언급 해본다.

반값 등록금

반값 등록금으로 등록금 부담이 줄면 대학 교육에 맞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대학교육을 장려하여 대학 진학률을 높이게 된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효과이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효과도 보아야 한다.

반값 등록금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경쟁력 없는 대학을 연명시켜 주게 된다. 이런 대학들은 학생 확보를 위해 유행을 타는 학과나 비용이 적게 드는 학과를 주로 운용하게 될 것이다. 학생 선발에도 특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을 것이고 산업의 수요와 불일치하는 공급을 만들어 내게 된다. 결국 실력 없고 특정 산업에서만 좋은 일자리를 요구하는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게 되어 개인과 사회 모두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게 된다.

경쟁력 있는 대학들도 반값 등록금은 등록금 인상 억제 효과가 있으므로 그 만큼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장기적으로 대학들은 교육부에 더 의존되고 학교발전을 위한 노력을 덜 하게 되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반값 등록금은 대학생과 그 부모들의 표를 얻기 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본 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학 문턱을 넘을 수도 없는 지극히 어려운 학생들은 목소리가 작고 그 수가 적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정부(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

우리 사회는 아직 정부와 국가를 동일하게 바라보는 경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는 국가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고용한 관료 집단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만큼의 절대적 권위를 지니지 않는다. 우리가 국가를 선택할 수는 없으나 정부는 수장도 5년마다 투표로 선출하고 조직의 규모나 편제도 그 결과로 변하기도 하는 가변성이 있다.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우리 교육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모든 문제의 근원인데도 정작 교육개혁은 근원인 정부부문에 의해 주도되며 다른 부문에 대한 개혁만으로 논의되고 있어 안타깝다. 정부가 양산하는 규제는 사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는 주장이 있다. 즉, 정부의 규제는 정치가나 관료, 정부의 이익을 위해 발효된다는 것이다. 민선 교육감들이 당선된 시도 교육청들 뿐 아니라 이를 감독하는 교육부의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은 위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일부 비리 사학을 핑계로 도입한 개방형 이사제는 설립자가 그 운영을 관장하는 사적 존재를 설립자의 의사와는 무관한 사람을 이사진에 포함시켜 공적 존재로 전환하려는 시도이다. 사학 비리를 단속할 다른 법이 있음에도 사소한 잘못을 핑계로 학교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교육부의 학교 통제 권한을 키우려 한다는 의심을 벗어나기 어렵다.

또한, 그간 평준화 정책의 대안으로 만든 자사고 입학 전형을 성적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전면 추첨제로 전환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수월성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전형 기준인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50% 기준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관(官)의 통제로 경쟁력을 상실한 공교육 문제를 그 원인이 자사고에 있는 것처럼 여론 몰이 하겠다는 의도이다.

현재 교육부의 정책은 좋은 교육에 대한 정책보다는 사교육 억제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사교육 억제를 위해 비교적 착한 사교육인 학원 설립을 억제한 결과 오히려 단속 곤란한 불법 과외 교습방을 활성화 시켰고 일인당 사교육비의 증가 현상을 가져왔다.

지금 우리 초·중등 교육은 정부 주도의 평준화, 사교육 억제 정책에 눌러 효율을 상실했다. 대학 교육은 고교 등급제와 본고사 금지 같은 선발방식의 제약, 교육부의 비합리적 대학 평가, 교육부 판단에 의한 선별적 지원, 반값 등록금 등의 효과로 교육부의 지원에 목매며 자가 발전 의지를 상실한 상태다.

교육 관료들은 이제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자신들의 개인적 출세욕과 부서이기주의, 통제 권력에 대한 집착이 우리 교육에서 문제들의 근원임에 솔직해져야 한다. 교육처럼 방대하고 동태(動態)적인 분야는 어떤 천재도 세부 사항까지 올바르게 인지하고 설계할 수는 없다. 부정확한 진단과 지적 자만심이 ‘결과의 평등’에 집착하는 대중의 아우성과 결합하여 ‘교육의 실패’를 양산했던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 더 이상 슈퍼엘리트를 자처하지 말아야 한다. ‘선택의 자유, 경쟁, 기회의 균등’이라는 엔진이 ‘교육’이라는 유체(流體)를 잘 돌릴 수 있도록 엔진과 관을 보수하는데 역할을 스스로 제한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도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교육은 특별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과 정부는 공공선(公共善)을 추구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레이건 대통령 1기 취임사 중 발췌문-

현재의 위기에서 정부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실 정부가 문제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이런 믿음에 유혹받곤 합니다.

“사회가 너무 복잡해져서 자율적으로 관리될 수 없다. 소수 엘리트가 관리하는 정부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 보다 우월하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 자기 자신을 통치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 중 누가 다른 사람을 통치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국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국가가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계 국가 중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 의해 승인된 것을 제외한 어떤 힘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동의를 넘어서 정부의 팽창을 점검하고 되돌릴 때가 되었습니다.

저의 의도는 국가와 국민이 정부에게 허락한 권한과 승인하지 않은 권한의 차이를 인식 하길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부를 없애자는 뜻이 아닙니다. 정부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잘 작동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의 등에 올라타지 않고 우리 옆에 서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기회를 질식 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그것을 제공할 수 있고 또한 해야만 합니다.

정부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성장이 초래한 간섭과 침범, 이것이 현재의 문제들과 공존하며 상응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학교 선택권과 학교 운영권

학교 선택권과 학교 운영의 자유는 꼭 개인의 행복 추구나 사적 재산권 보호와 같은 가치 때문에 강조되는 것만은 아니다. 다양한 적성과 소질을 가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와 수준의 질 좋은 학교들이 많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들이 교육 생산자로서 노력할 동기가 부여되고 경쟁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자신에게 적합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교육을 민간이 주도할 경우 다양한 교육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교가 출현할 것이며, 소비자는 자신의 소질과 기호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각 학교도 생존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출산률 감소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각 학교의 노력도 가속화될 것이며 학교와 교사도 경쟁 무풍지대, 철밥통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게 된다. 경쟁은 참가자에게도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질 좋은 교육이 제공되는 교육 강국으로 가는 길은 교육의 자율화가 정답이다. 학교간의 경쟁이 이뤄지고 그 노력에 의한 차이가 소비자에 의해 판정되지 않는 한 교육의 경쟁력은 높아질 수 없다. 학교는 본질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런 시도는 어느 날 갑자기 추진하는데 많은 저항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동의하게 하려면 모범적 사례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 1개의 도나 광역시 단위에서라도 교육 자치를 시행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

“교육 자치 도시”

학교의 학생 선발권과 입시제도

학교는 경쟁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의 자체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학생들을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교육의 정부주도는 획일적인 선발방법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는 학생들이 가진 다양한 정보를 검토할 수 없고 제대로 된 선발을 할 수 없다. 학교의 신입생 선발권이 자율화되면 각 학교는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따라 차별화된 선발 기준을 만들 것이며, 소양이 각각 다른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커질 것이다.

대학 입시에 국한해서 이야기 하자면 현재 내신과 수능은 학생선발의 방식으로써 타당성을 상실한 상태다. 현실적으로 학교간에 실력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을 무시한 내신, 학생의 문제 해결력을 풀이과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결과로만 판단하는 수능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얼마 전 정보 올림피아드에서 만점을 획득한 학생이 서울대에 진학할 수 없다는 기사가 이 현실을 웅변한다.

내신은 학생의 성실성을 평가하는 정성(定性)적 정보로 국한시키고 수능은 자격 고사화해야 한다. 오히려 내신과 수능이 사교육 증가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귀 기울여 봐야 한다. 실질적인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는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면 된다. 학생을 뽑아서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 가장 잘 학생의 적성과 능력을 잘 판단할 수 있다.

교육 환경의 변화와 인력양성의 방향

한 상 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1. 언어장벽 : 이미 speech2text(STT)의 경우 영어, 중국어 등에서 컴퓨터는 인간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영어 교육의 비용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 실시간 번역 및 인공지능 : Google, Baidu는 실시간으로 인간이상의 언어 및 시각 처리 기능을 갖는 알고리즘을 공개했고,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과 심층 신경망을 결합한 Alphago로 인간 최고수를 이겼음.
 - * Deepmind는 가치학습 및 정책학습에 심층학습을 결합하여 기존 바둑에 대한 고속 학습을 통해 인간이상의 성과를 보였으며 이에 사용된 컴퓨터와 유사한 성능의 하드웨어(Nvidia DGX)가 저가에 판매되고 있음.
 - 한국어도 최근 SK, 삼성 및 게임 회사 등에서 상용화
 - 영어에 비해 한국어는 어미의 변화가 심해 음성 사전을 구축하는데 난점이 있으나, 음성 문자인 한글의 경우 몇 가지 법칙을 이용해 grapheme2phoneme(철자2음성)가 용이함.
 - 인공지능 발달로 인간과 중국어 또는 영어로 인간과 대화하는 컴퓨터(Microsoft Tay)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영어 교육에 대한 비용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2. 교육방법 : MIT, Coursera와 같은 온라인 무료 또는 저비용의 새로운 교육 방식이 대두되고 있으며 동 과정에 기초한 능력 중심의 새로운 인력시장이 대두 될 것으로 전망됨.
 - MIT 는 강의중 상당 부분을 공개하면서 동 강의 내용에 대한 speech2text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학강의의 경우 강의 내용이 정확한 것으로 평가됨.
 - * 향후 우리나라 기초 과학 발전은 MIT opencourseware 를 어떻게 우리 교육

체계에 흡수 처리하느냐에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 Coursera의 경우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 강점을 보이고 있음.

- 일부 대학에서 MIT 강의를 한글 자막처리 서비스 개시 시작하고 있으며, STT 발전에 따라 자동 번역이 곧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교육 환경의 큰 변화가 예상됨.
- 이에 따라 과거 대학 자격증형 시대가 약해지고, MIT 코스 등에 기초한 문제출제 및 자격증 등이 등장하면서 능력 중심의 새로운 인력시장이 대두 될 것으로 전망됨.
- 아두이노 등에 따라 고비용으로 구축되던 전자 키트가 저비용으로 가능해졌는데 이를 통제하는 언어로 Python 이 크게 활용되고 있으며 미국 대학에서 컴퓨터 언어 교육은 C 중심에서 Python 으로 바뀌었음.

* 시스템 구축에 있어 Python은 C에 비해 1/10 내외 시간을 소모함.

* 이에 따라 오바마는 미국 초등학생에게 Python을 습득케 하는 것을 강구할 것을 촉구함.

3. 사학 문제 : 인구노령화에 따른 입학생 감소 및 새로운 교육 방법의 등장으로 기존 사학은 존립이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교육 혁명을 주도하는 자율 사학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

- 지방사학과 수도권 사학간 규제의 비대칭성 및 사학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교육부의 재정 지원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규제자이면서 동시에 후원자인데 시대변화에 따른 급격한 구조조정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됨.
- 사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면 현재에 처하고 있는 공급과잉에 따른 사교육비 과다 문제 등이 완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시에 책임 강화 장치가 필요함.
- * 자율성 강화에 따른 상업성 강화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탁법 등을 이용하여 소득(기존 소유자 귀속)과 부(신탁법인이 소유)를 분리하고 소득에 대해 세제를 통해 사학간 M&A 등이 활성화 될 수 있음.

4. 교육 정책의 방향 : MIT opencourse 와 같이 저비용으로 고도의 과학 기술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과 기존 교육 체계간 연계를 강화하면서 동 부분을 자격증으로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

- 현재와 같이 NCS 방식에 따라 신규 과목을 개발하는 방식은 고비용 구조로 평가되므로 신규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하되 전면적 개발보다는 부분적 개발 전략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 지금까지 정부는 신규 성장 분야를 선정해 동 분야에 대한 R&D 를 지원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나 성과가 점차 약해지고 있으므로 지방소재 대학의 신기술 교육에 대해 정부지원을 강화
- 동시에 현재 중급기술 인력중심으로 구성된 산업인력공단 등의 자격증을 MIT opencourse, Coursera 등에서 제공되는 기존 고급 기술 및 신기술에 연계된 자격증으로 확대하여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고급인력을 배출함.

5. 결론 : 교육에 대한 자율성 강화가 기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나 이를 적용하는 경우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이 첨예해질 것이므로 갈등이 약한 신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과 교육자율을 강화하는 것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 대학 구조조정 및 사교육비 과다 문제는 그 자체를 해결하는 직접적 해결방안보다 교육 및 인력양성 환경을 정비하여 간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됨.
- 예를 들면 컴퓨터 OS 의 경우 미국 대학, 북한 및 중국은 리눅스를 주로 사용하여 고도의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가정보시스템이 MS 및 이에 기반한 한글 및 보완체계(active-X)로 되어 있어 대학에서 신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이 늦어지고 있음.

* 미국에서 대부분 고도 시스템(예 : 알파고)은 리눅스에서 개발되는 추세이며 심지어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도 리눅스 공개 S/W 개발에 참여함.

- 이때 리눅스를 정부가 주도해 사용하는 직접 해결방안보다는 한글문서를 리눅스에서도 자동으로 pdf 등으로 viewer를 이용해 전환해서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정부주도로 제공되면 컴퓨터 OS에 대한 종속 문제가 완화됨.

[토론 ③]

대한민국의 교육, '자유'를 만나야 바로 선다!

황 성 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

[illegible]

[illegible]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길 38(북창동) 단암빌딩 별관 3층

Tel : 02-741-7660~2

Fax : 02-741-7663

<http://www.cubs.or.kr>